

공직기강 확립 · 갑질 근절 나선다

전북자치도,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 방안' 발표 · 도정혁신Red팀 운영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실현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에서 나타난 공직기강 해이 등 도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첫째, 고위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강해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감찰하고 산하 공공기관 갑질 실태 감사 의무화, 찾아가는 현장 패트롤 확대 등 공직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임기제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리 절차를 촘촘히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채용 및 연장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일관된 지도·감독 매뉴얼을 통해 보다 꼼꼼히 관리하고 비위행위 적발시 경영평가 지표반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

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도정 혁신을 위해서, 정책 취약점 분석을 통해 정책 품질을 강화하고 정책조정회의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 정책협의회 및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사전 협의와 간담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담아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도정혁신Red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Red팀 구성의 목적은 도정의 내부 구성원들이 도지사

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Red팀은 소통기회를 대폭 늘려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 혁신방안을 통해 도정 내부와 산하 공공기관까지 부패와 비리를 근절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정책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취약점 분석을 통해 신속 정확한 정책실행으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향후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행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26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자치도와 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송상재 노조위원장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도 공노조, 단체협약 체결

후생·복지, 인사·조직, 청사·환경 등 52개 안건 합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노동조합과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9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간의 교섭 끝에 이뤄졌으며, 후생·복지, 인사·조직, 청사·환경 등 3개 분야에서 총 52개 안건에 합의했다.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 주요 합의 내용은 출산·양육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과 육아공무원을 위한 주 1회 재택근무 도입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조직 분야에서는 다양한 직류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도정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감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했다. 직원들이 전북의 미래와 성공에 대해 동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청사·환경 분야에서는 노후화된 직속기관과 사업소 시설을 개선해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도민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은 업무 집중도와 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상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도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송상재 전북도청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도민들에게 더 질 높은 봉사를 제공하고, 민선 8기의 '기업이 모이는 전북, 희망이 보이는 전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감 능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했다. 직원들이 전북의 미래와 성공에 대해 동기를 갖고 /이만호 기자

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서 '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복지 행정을 펼친 지자체로 2014년부터 11년 동안 인정을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발굴·기획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올해 사업(3개분야, 32개서비스)을 통해 406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2,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약 22,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시군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고도화, 종결자 사후관리, 만족도 저조사업 관리 강화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했다.

또한, 농촌지역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노력했다. 유사중복사업 재구조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수요에 따른 심정비율 격차 완화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효율성도 개선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11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이번 성과는 도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그리고 14개 시군 공무원들 모두가 도민들의 사회서비스 품질 만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최영두 부안군수가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산악관광진흥지구 조성 본격 시동

도내 6개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선정 · 협약체결...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 투자 유치 활동 전개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선도지역 평가에서 진안, 무주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됨으로써 본격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에서 진안군(군수 전춘성), 무주군(군수 황인홍), 장수군(군수 최훈식), 임실군(군수 심민), 고창군(군수 심덕섭),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한 자리에 도민 가운데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흥지구는 전북특별법에서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래보다 더 높은 곳(50~800), 더 경사진 곳(25~45도)에서 관광호텔, 리조트, 산악레포츠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이 되면 '건축법' 등 27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 일체 처리될 뿐 아니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나 전북도가 설치 지원할 수 있다.

도는 2024년 1월부터 진흥지구 1차 수요조사(14개 시군 41개소), 2차 수요조사(14개 시군 19개소)를 실시하고 대상지에 대한 입지여건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했으며, 이 중 8개 지구에 대한 서류·현장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6개 지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진안, 장수)'는 작은 대관령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지역권약육식물단지' 및 '지역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하여 휴양문화 및 숙박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며, '향로산 진흥지구(무주)'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복지지구와 연계된 산악관광진흥지구 개발로 정상에서의 전망을 관망하고, 액티비티한 관광 시설을 도입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육정호 진흥지구(임실)'는 국사봉-나래봉-운암교를 잇는 풀빛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육정호를 중심으로 국사봉, 봉어섬 생태공원, 나래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방장산 진흥지구(고창)'는 고창의 중심에 위치한 방장산에 자연환경, 예술문화와 관광유산을 하나로 묶어 줄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호리 진흥지구(부안)'는 진서면 일원에 산림·해양형 산악관광 컨셉으로 체류형 복합문화 리조트, 해안 레일바이크, 산악자전거길 조성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협약식은 도와 선도지역 선정지자체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 △산악관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노력 △공동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및 산악관광 콘텐츠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 체결 후에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력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특장차 메카로 이제 인력난 문제 없다'

김제시,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 공간 조성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기업부가 공동으로 심사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세부과제인 '시군 구연고산업육성사업'에 김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김제시 특장차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사업을 통해 △'특장차 전문인력양성 거점 공간 조성 사업'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 계획이다.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특장차 전문교육 공간과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교육센터를 백구 제2 특장 전문단지 인근에 조성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안

전교육 및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특장차 기업의 인력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은 총사업비 14억 3천만 원으로, 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재직자 및 교육생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장차 인증지원, 디자인 기반 실차개발 등 근로자 역량 강화와 제품화 기술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특장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김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이만호 기자

특별한 자치의 시작... 전북특별법, 333개 특례로 '활짝'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지구 지정 예정이다.

이후 내년에는 9개 지구 2026년 이후 4개 지구를 지구 지정함으로써 전북의 핵심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전북의 최대 강점인 농생명 자원을 활용, 그동안 농업생산에 그쳤던 지역을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집적화를 통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하기 위한 농생명 산업지구는 지난 9월 선도지구 7개소를 선정했다.

농식품부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의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 내 반려동물, 곤충산업 등 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했으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적극 활용해 국가 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4개 지구 특구 조성으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K-문화산업 및 산악관광 진흥으로 문화생태계 조성
한식, 한복, 판소리, 서예 등 잘 지켜온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인력양성·창업·기업 유치 등이 가능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2024년 후보 지구 4개소를 선정했다.

더불어 영커 기관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2025년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과 후보 지구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할 예정이다.

도내의 풍부한 산림자원(산림율 75%)을 활용해 산림치유, 휴양, 체험 등이 가능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구를 6개소를 선정했고, 2025년 개발계획을 수립 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농생명 · 문화관광 · 고령친화 등 분야별 기반 강화

▲K-문화산업 및 산악관광 진흥으로 문화생태계 조성
한식, 한복, 판소리, 서예 등 잘 지켜온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인력양성·창업·기업 유치 등이 가능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2024년 후보 지구 4개소를 선정했다.

더불어 영커 기관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으며, 2025년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과 후보 지구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할 예정이다.

도내의 풍부한 산림자원(산림율 75%)을 활용해 산림치유, 휴양, 체험 등이 가능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구를 6개소를 선정했고, 2025년 개발계획을 수립 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먹거리부터 의료기기까지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함께 조성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내년도 국가예산(추경) 확보에 공조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역거리 첨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특화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 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지구 내 입주기업에 혁신금융 서비스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지원, 국내외 국제회의·세미나 참가 및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드론 등 무인도용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설계부터 제작 인증까지 사업화 전단계 수행이 가능한 무인도용체 종합실증단지도 조성한다.

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특별한 제도 시행

출입국관리 특례를 통해 4개 지구·특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구 단지 활성화를 위한 우수인력 등 확보가 가능해진다. 특례 적용 지침을 법무부와 협의해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에 4개 지구 지정 시 적용될 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돼 4개 지구 특구 내 사업 추진 시 신속한 협의가 가능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립공원 지정 해제·축소(10만㎡ 이상)에 대한 환경부 승인 절차가 삭제됨으로써 도립공원의 생태·환경자산의 현명한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해외 우수인력 및 글로벌 창업기업 전북 이전 촉진을 위한 법무부의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공모에 지자체 최초로 전북이 선정돼, 이를 활용해 내년부터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창업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2월 27일,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본격 시행된다.

전북특별법은 자치분권과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으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26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을 공포 이후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5대 분야의 특례를 담은 131개 조문을 76개 사업과 과제로 구체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조례 제·개정 및 기본방향 설정, 기본구상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53건의 특례는 법 시행일 즉시 실행, 나머지 22건은 2025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지구·특구 조성으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가장 중요한 특례인 지구 특구 특례 14개 중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된다.

먼저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 고시되고 농생명 산업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후보 지구를 선정하고